연세경제연구 제■권, 제2호
Yonsei Economic Studies, Vol. ■, No. 2 (September 1996)

한국 유치산업의 성숙과 성장 : 실증적 증거와 그 해석

이 제 민

이 연구는 여타 개도국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보호를 받은 유치산업이 대부분 성숙했거나 성숙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인 다음, 유치산업의 생산이 성숙산업의 생산보다 더 빨리 증가했음을 보인다. 또한 한국에서 유치산업의 성숙과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를 차례로 검토한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와 그 해석에 근거하여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신고전파'나 '시장친화적' 견해에 비해 '수정주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는 것을 밝힌다.

Ⅰ. 서 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후 대부분의 개도국은 유치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도국에서의 경험으로 보아 유치산업 육성은 그 처음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치산업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는 "개도국에서 유치산업은 별로 성숙하는 예가 없다는 인상"(an impression that there is not much maturation of infants in very many developing countries, Bell 등 [11], p. 103)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유치산업 육성정책의 실패는 경제발전론에 있어서 '신고전파' 이론이 득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동아시아의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이 신고전파적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로 거론되었다. 동아시아NIEs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유치산업의 육성보다는 자유무역정책을 택한 결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가개입을 줄인 결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신고전파적 해석은 '수정주의적' 접근법에 의해 도전 받게 되었는데, 이 접근법의 주창자들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는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였으며 중요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49.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동아시아경제의 성공은 자유방임적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통치한(governing the market) 결과라는 것이다(Amsden [6], Wade [22]). 수정주의자들은 당연히 동아시아국가들에 있어서 유치산업의 육성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을 논하면서 '시장친화적 견해'(market friendly view)를 제시하였다(World Bank [26]).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당연히 유치산업육성도 인정하지만 그 의미가 별로 없었다는 것으로 귀착된다.

문제의 핵심은 유치산업육성이 유치산업의 성숙과 성장으로 귀착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신흥공업국에서 중점육성산업의 생산성증가가 더 빨랐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또한 산업성장의 패턴이 비교우위의 원칙으로부터 괴리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연구는 두 가지 다 그 가능성을 부인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예컨대, Kwon [18], Lee와 Rashid [19] 참조).[1]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유치산업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생산성증가가 아니라 비교우위의 추세를 직접 살펴봄으로써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한국에 있어서 산업성장의 패턴이 정태적 비교우위로부터 체계적으로 괴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나아가서 한국에서 이처럼 다른 개도국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도 검토할 것이다.

제Ⅱ절과 제Ⅲ절에서는 한국산업에 있어서의 비교우위의 추세를 검토하여 유치산업이 성숙하였는가를 고찰한다. 제Ⅳ절에서는 비교우위와 산업성장의 패턴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제Ⅴ절에서는 제Ⅱ, Ⅲ, Ⅳ절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실증적 결과가 나오는 이유에 대하여 논의한 뒤 결론을 내린다.

Ⅱ. 실효보호율의 추세

유치산업이 성숙했는지 여부는 초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던 산업이 그 뒤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교우위지표를 구성해야 한다. 종전의 연구에서는 비교우위지표로서 실효보호율을 쓰고 있는데

1) 기존연구 중에 한국에서 유치산업이 성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도 있고(Westphal [24]), 엔지니어링산업에서 성숙기간을 계측하려는 시도도 있다(Jacobsson [16]). 그러나 전자는 실증적 연구의 뒷받침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후자는 한 산업에 대한 부분적 증거에 불과하다.

(Krueger와 Tuncer [17], Bell 등 [11], Harrison [15]), 이 연구에서도 실효보호율을 쓰고자 한다. 물론 이 때 실효보호율은 관세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비교(잠재관세율)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유치산업에 대한 종전의 실증적 연구는 어떤 시점에서의 실효보호율을 계산하고 그 후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 실효보호율이 높은 산업에서 높았는지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중점육성산업에서 생산성증가율이 더 높았는지를 검토하는 세계은행연구는 사실상 유치산업에 대한 종전의 연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 가정은 국내의 총요소생산성변동 이외에는 비교우위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우위의 변동에는 국내의 총요소생산성변동 말고도 배분적 효율성의 변화, 교역조건의 변화(이것은 다시 해외에서의 생산성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Nishimitsu와 Page [20]는 타일랜드의 자료를 써서 실제로 국내에서의 총요소생산성증가는 비교우위변동의 작은 부분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에는 실효보호율 자체의 추세를 계산한 자료가 아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이것들은 모두 법정관세율보다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을 비교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비교우위지표로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실효보호율의 장기적 추세를 도출한 金光錫 · 洪性德 [2]과 洪性德 [5]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金光錫 · 洪性德 [2]의 자료와 洪性德 [5]의 자료는 원래 서로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교역재부문(전 산업에서 서비스업 제외)을 217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분류기준을 일치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洪性德 [5]의 자료에는 그 중 31개 산업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은 제외하고 186개 산업의 자료만 이용하였다.

필자는 이미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유치산업이 성숙하는지를 일차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졸고 [4] 참조). 이 연구에서는 그 연구보다 좀더 덜 세분된 자료를 구성하여 규칙성을 발견하기 쉽게 하고, 다음 절에서 볼 비교우위와 산업성장 간의 관계도 쉽게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이들 186개 산업에 대한 실효보호율 자료를 다시 아래에서 사용할 장기적인 불변가격기준생산액의 자료분류와 대응시키기 위하여 29개 산업(1차산업 5개, 제조업 24개)으로 통합하였다. 186개 산업 분류를 29개 부문 분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실효보호율을 국제가격기준부가가치로 가중평균하였다. 국제가격기준부가가치가 음수(−)인 경우에는 실효보호율과 국제가격기준부가가치를 이용하여 국내가격기준부가가치를 구하고, 양자를 통합대상인 산업간에 합산함으로써 실효보호율을 구하였다. 단, 이 과정에서 국내가격기준부가가치가 음수로 되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이

것은 단기적인 비정상상태로서 비교우위지표를 구성하는 자료로 삼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0으로 처리하였다.

실효보호율은 Corden방법에 의해 계산한 것을 쓰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방법이 變異가 적어서 추세를 더 잘 판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Corden방법이 Balassa방법보다 국제가격기준부가가치가 음수가 된다든지, 아주 높은 값에서 갑자기 아주 낮은 값으로 떨어지는 頻度가 훨씬 낮다.

실효보호율은 국내판매에 대한 것과 총판매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효보호율 자료를 작성하였던 연구자(金光錫 · 洪性德 [2], p. 7)의 견해에 따라 총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이 비교우위지표로서 더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것을 쓰기로 한다. 洪性德 [5]의 자료에는 총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이 나타나 있지 않고 국내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만 있으므로, 전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후자와 수출에 대한 실효보호율을 국제가격기준판매액으로 가중평균하였다.[2)]

이상 金光錫 · 洪性德 [2]과 洪性德 [5]의 자료로부터 1963, 1970, 1975, 1978, 1980, 1983, 1985, 1988, 1990년에 대한 실효보호율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단, 1963년의 자료는 비교우위지표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1963년에는 국내생산이 극히 소량이고 공급이 거의 수입으로 채워지는 비경쟁수입품목이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이 많은데, 이들 품목의 실효보호율은 신빙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1963년의 실효보호율을 검토해 보면 그 불규칙성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삼기가 어렵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63년을 제외하고 1970년 이후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1970년 이후의 실효보호율 자료는 〈표 1〉에 수록하였다. 〈표 1〉은 29개 산업에 대한 실효보호율과 아울러 1차산업, 제조업, 전교역재산업(1차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실효보호율을 제시하고 있다.

유치산업의 성숙을 판단하기 위해 실효보호율을 쓰는 데는 이론적으로 보아 보호가 유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는 것(Corden [13], 제9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보호가 유치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유효하고 용이한 정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3)] 전후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도국은 보호를 유치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지금까지의 유치산업 육

2) 여기서 Corden방법을 사용하거나 Balassa방법을 사용하거나 결론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총판매가 아니라 국내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을 사용하더라도 역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정책의 집행까지 고려하면 보호는 보조금에 비해 결코 열등하지 않을 수 있다. 재정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과세나, 조세감면, 금융보조금을 위한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등은 그 나름 대로 여러 가지 시장기구의 왜곡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도국은 정의상 그 재정상태가 취약하게 마련이므로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문제가 되는 반면 보호관세는 재정수입의 원천이라는 장점이 있다.

〈표 1〉 실효보호율

(단위 : %)

1. 작물	44.7	50.3	95.5	144.1	119.2	146.4	182.4	232.2
2. 기타농산물	−21.9	−24.7	39.7	110.5	298.3	301.6	−370.7	−419.3
3. 임산물	2.0	−17.3	49.5	76.1	15.7	70.2	41.3	42.8
4. 수산물	1.9	11.4	32.9	−37.7	−24.3	−33.3	−23.2	0.3
5. 광산물	2.4	−3.5	27.7	−3.6	38.2	35.6	25.1	48.0
6. 식료품	22.2	−8.4	−15.8	−29.3	−48.7	−50.3	−46.1	−40.4
7. 음료품	−12.2	−18.4	−14.4	7.3	1.0	−11.6	−25.5	−14.5
8. 연초	−4.6	−30.4	−51.4	−21.4	−13.0	−25.0	−48.9	−48.2
9. 섬유	−0.3	−13.3	−6.9	7.7	0.5	−4.3	−8.9	−2.2
10. 의복	9.6	−24.0	−8.1	−8.3	10.2	0.1	−23.2	−7.7
11. 가죽	59.2	38.7	42.0	−2.3	−3.9	−38.5	−43.0	−49.4
12. 나무	120.9	18.8	4.7	−4.8	−9.7	−9.9	−11.1	−7.8
13. 종이	5.6	−5.8	−2.0	12.9	13.8	0.3	7.3	7.7
14. 인쇄·출판	−23.1	−29.5	36.3	−5.3	−7.9	−4.9	−5.2	−3.0
15. 산업용화학	6.0	−24.8	15.0	19.5	47.5	27.5	−7.4	3.8
16. 기타화학	94.1	59.2	39.8	13.8	1.4	8.5	27.3	17.5
17. 석유·석탄	−34.5	5654.1	87.7	−316.8	−455.8	992.6	30.5	−35.8
18. 고무	40.0	−3.9	−12.5	0.4	−8.7	−16.9	12.3	−3.0
19. 도자기	20.9	−12.5	−8.4	31.6	20.6	14.4	21.8	−4.1
20. 유리	12.7	−8.4	−13.7	40.4	15.7	1.4	−0.8	−6.0
21. 비금속광물	25.0	−1.5	11.4	33.8	24.9	34.8	−2.6	26.7
22. 철강	96.7	57.1	31.9	9.8	2.8	−3.3	−7.6	2.5
23. 비철금속	11.9	−22.9	28.2	7.7	−1.1	−25.5	34.8	68.5
24. 조립금속	39.9	21.7	14.2	46.3	30.5	42.3	19.8	13.4
25. 기계	30.3	−11.4	3.0	48.1	31.0	18.0	14.7	39.0
26. 전기기기	44.7	12.0	5.7	21.2	9.7	4.6	2.8	10.5
27. 수송기계	105.6	23.8	56.3	86.9	53.3	69.3	44.3	30.9
28. 정밀기기	95.9	19.6	48.6	44.1	31.7	25.3	9.2	21.0
29. 기타제조업	−0.5	−16.4	17.8	56.3	48.3	26.9	11.9	17.2
1차산업	27.7	31.5	78.7	73.3	96.3	89.6	113.6	160.0
제조업	15.3	−3.8	9.5	18.6	15.0	8.3	−0.2	4.0
전교역재산업	21.1	8.1	28.3	29.9	27.4	20.4	9.7	17.1

주 : Corden방식으로 계산한 총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임.

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모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수치를 보면 1968년의 실효보호율과 보조금을 합한 실효보조율에서 산업간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실효보호율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金光錫·웨스트팔 [1]). 兪正鎬 외 [3]의 제8장에 의하면 1990년에 이르러서도 보호를 통해 재분배되는 소득이 중앙정부세출의 약 3분의 2, 즉 국민총생산의 13%에 이르며, 그 중 60% 정도는 제조업에 주어진다. 보조금이 아무리 많아도 이와 같은 보호의 효과에 맞먹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실효보호율의 추세를 1970년부터 검토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1970년이 현실적으로 신뢰할 만한 실효보호율 자료의 추세가 이용 가능한 최초년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1970년을 출발점으로 잡는 의미는 있다. 한국이 1960년대 중반에 수출지향적 공업화전략으로 전환했을 때 기존유치산업에 대한 보호를 제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음 단계의 유치산업을 육성하였다. 나아가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1980년대에는 특정산업을 선호하는 정책은 중단하였지만, 과거의 선별적 육성정책의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1970년도를 최초년도로 잡을 경우 수출지향적 산업화 하에서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한 결과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의 수치로 보면, 1970년 현재 실효보호율의 산업간 분포가 큰 변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수출지향적 산업화가 수출만 자유화하였지 수입은 자유화하지 않은 바탕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국제적 비교연구 결과에 의하면 〈표 1〉에 나타난 실효보호율의 산업간 차이에 의해 대표되는 한국의 시장기구의 왜곡 정도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덜하지 않았다고 한다(Balassa 등 [10], Stern 등 [21], 제3장).

1970년 현재 유치산업인 산업은 양(+)수의 실효보호율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표 1〉에서 보면 18개 산업이 양수의 실효보호율을 나타내고 있다. 유치산업이 성숙하는 가장 단순한 경우는 이 양수의 실효보호율이 음수로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1970년부터 1990년간 다음의 산업이 성숙하였다. 괄호 안의 수치는 실효보호율이 음수로 나타난 최초 연도이다.

식료품 (1975), 가죽 (1980), 나무 (1980)

그러나, 실효보호율이 음수로 떨어지지 않은 산업 중에도 하락추세가 확연히 드러나는 산업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한다.

$$\log(ERP_i(t)+100) = a_i + b_i t + \varepsilon_i t \qquad (1)$$

$i = 1, 2, \cdots, 16, 18, \cdots, 29$

t는 실효보호율 자료가 이용 가능한 연도를 나타낸다. 석유 및 석탄산업(i=17)은 제외하는데, 그 이유는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원유파동으로 동산업에서의 실효보호율의 추세가 지극히 불규칙적이기 때문이다.

식 (1)의 기울기 b_i에 대한 추정 결과는 부표에 나타나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다음 4개 산업이 10%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음수의 b_i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쌍방검증). 괄호 안의 수치는 유의수준이다.

철강 (1%), 기타화학 (5%), 전기기기 (5%), 정밀기기 (5%)

1970년부터 1990년간 3개 유치산업이 실제로 성숙하였고 4개 산업이 유의적으로 성숙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개도국에서 나타난 결과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이다. 그러나 1970년 현재 18개의 산업이 양수의 실효보호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모두 7개 산업이 성숙하거나 유의적으로 성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결과는 아니다.

1970년 현재 양수의 실효보호율을 나타내고 있는 산업 중에서 일부 1차산업은 유치산업이라기보다는 사양산업(혹은 노쇠산업, 즉 국제경쟁력이 없으면서 향상될 가능성도 없는 산업)이다. 부표에 나타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작물과 광산물은 실효보호 정도가 유의적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임산물의 실효보호 정도도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것은 한국의 자원부존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1970년 현재 유치산업은 15개가 남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5개 유치산업 중에서 7개가 성숙하거나 성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970년에 양수의 실효보호율을 나타내고 있는 산업 중에서 사양산업이 아닌 산업도 실제로는 유치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 종이, 산업용화학, 유리 등은 실효보호율이 전교역재산업보다 낮은데, 이것은 이들 산업이 실제로 비교우위가 있지만 원화의 과대평가 때문에 양수의 실효보호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1970년 이외 연도에 있어서도 실효보호율이 원화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Ⅲ. 비교생산비지표의 추이

이처럼 원화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 즉 환율이 균형환율로부터 乖離하는 경우를 감안해 주기 위해서는 졸고 [4]에서와 같이 다음의 수치를 계산하여 비교우위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C_i(t) = (1+EPA_i(t))/(1+EPA_A(t)) \qquad (2)$$

$EPA_i(t)$ = i산업의 t시점에 있어서의 총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

$EPA_A(t)$ = 전교역재산업의 t시점에 있어서의 총판매에 대한 평균실효보호율

$i = 1, 2, \cdots, 29$

$C_i(t)$는 t시점에 있어서의 전교역재산업(1차산업과 제조업) 평균에 대비한 해당산업의 국내가격부가가치의 국제가격부가가치에 대한 비율의 상대적 乖離 정도로서 '비교생산비지표'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4] 물론 $C_i(t)$가 작을수록 비교우위가 강하며, $C_i(t)$가 1보다 작으면 비교우위산업, 1보다 크면 비교열위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C_i(t)$값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970년 현재 13개 산업이 1보다 큰 $C_i(t)$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작물은 분명히 사양산업이고 나머지 12개가 유치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12개 유치산업 중 다음의 6개 산업은 1970년부터 1990년의 기간에 성숙하였다.

식료품 (1975), 가죽 (1980), 나무 (1978)
고무 (1975), 철강 (1983), 전기기기 (1978)

괄호 안의 숫자는 $C_i(t)$가 1 이하로 떨어진 최초 관찰년도이다.

실효보호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_i(t)$의 경우에도 1970년부터 1990년 사이에 그 값이 실제로 1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떨어지는 경향이 드러나는 산업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한다.

$$\log(C_i(t)) = c_i + d_i t + \varepsilon_{it} \qquad (3)$$

$i = 1, 2, \cdots, 16, 18, \cdots, 29$

---

4) 이 지표는 Balassa등 ([10] pp.7~9)이 이야기하고 있는 '순실효보호율' (net rate of effective protection)에 1을 더한 것과 일치하는 값이다. 이 지표를 비교생산비지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실효보호율 대신 명목보호율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산업 전체의 명목보호율은 모든 교역재산업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간의 괴리를 가중평균한 것으로서 자국통화의 과대평가 정도와 일치한다. 개별산업의 비교생산비지표를 구하려면 식 (2)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과대평가 폭을 감안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실효보호율이 명목보호율보다 월등히 우월한 개념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표 2〉 비교생산비지표

품 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 작물	1.195	1.390	1.524	1.879	1.721	2.046	2.574	2.837
2. 기타농산물	0.645	0.696	1.089	1.620	3.127	3.336	—[1]	—
3. 임산물	0.842	0.765	1.165	1.356	0.908	1.414	1.288	1.220
4. 수산물	0.842	1.031	1.036	0.480	0.594	0.554	0.700	0.856
5. 광산물	0.846	0.893	0.996	0.742	1.085	1.126	1.141	1.264
6. 식료품	1.009	0.847	0.656	0.544	0.403	0.413	0.491	0.509
7. 음료품	0.725	0.755	0.667	0.826	0.793	0.734	0.679	0.730
8. 연초	0.788	0.644	0.379	0.605	0.683	0.623	0.466	0.442
9. 섬유	0.823	0.802	0.726	0.829	0.789	0.795	0.830	0.835
10. 의복	0.905	0.703	0.716	0.706	0.865	0.831	0.700	0.788
11. 가죽	1.315	1.283	1.107	0.752	0.754	0.511	0.520	0.432
12. 나무	1.824	1.099	0.816	0.733	0.709	0.748	0.810	0.787
13. 종이	0.872	0.871	0.764	0.869	0.893	0.833	0.978	0.920
14. 인쇄·출판	0.635	0.652	1.062	0.729	0.723	0.79	0.864	0.828
15. 산업용화학	0.875	0.696	0.896	0.920	1.158	1.059	0.844	0.886
16. 기타화학	1.603	1.473	1.090	0.876	0.796	0.901	1.160	1.003
17. 석유·석탄	0.541	53.229	1.463	—	—	9.075	1.190	0.548
18. 고무	1.156	0.889	0.682	0.773	0.717	0.690	1.024	0.828
19. 도자기	0.998	0.809	0.714	1.013	0.947	0.950	1.110	0.819
20. 유리	0.931	0.847	0.673	1.081	0.908	0.842	0.904	0.803
21. 비금속광물	1.032	0.911	0.868	1.030	0.98	1.120	0.888	1.082
22. 철강	1.624	1.453	1.028	0.845	0.807	0.803	0.842	0.875
23. 비철금속	0.924	0.713	0.999	0.829	0.776	0.619	1.229	1.439
24. 조립금속	1.155	1.126	0.892	1.126	1.024	1.182	1.092	0.968
25. 기계	1.076	0.820	0.803	1.140	1.028	0.980	1.046	1.187
26. 전기기기	1.195	1.036	0.824	0.933	0.861	0.869	0.937	0.944
27. 수송기계	1.698	1.145	1.218	1.439	1.203	1.406	1.315	1.118
28. 정밀기기	1.618	1.106	1.158	1.109	1.034	1.041	0.995	1.033
29. 기타제조업	0.822	0.773	0.918	1.203	1.164	1.054	1.020	1.001
1차산업	1.055	1.216	1.393	1.334	1.462	1.575	1.947	2.200
제조업	0.952	0.890	0.853	0.913	0.903	0.900	0.910	0.888

주 : 1) 기타농산물 및 석유, 석탄의 경우 몇 개 관찰치에서 국제가격부가가치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 관찰치에 대해서는 비교생산비지표가 무의미하므로 계산하지 않았다.

회귀식의 기울기, 즉 d_i의 추정치는 부표에 제시하였다. 10%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d_i가 음수로 나타나는 것은 다음의 두 산업에서이다. 괄호 안의 수치는 유의수준이다.

정밀기기 (5%), 기타화학 (10%)

$C_i(t)$는 그 구성방법상 $ERP_A(t)$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ERP_A(t)$는 물론 i산업 이외의 산업이 얼마만큼 보호받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C_i(t)$는 사전적인 적정수치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계산한 수치로서 양자간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추세를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전적 적정해로서의 $C_i(t)$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C_i(t)$의 사후적 값을 연장하면 위의 두 산업이 1990년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성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서 그칠까 한다.[5]

$C_i(t)$ 기준으로 보면, 1970년 현재 12개 유치산업 중에서 8개 산업이 성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숙하지 않았거나 그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산업은 4개인데, 그 중 비금속광물은 1975년 이후 7개 관찰년도 중 4개에서 $C_i(t)$가 1보다 작아서 성숙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조립금속과 기계도 1975년도 이후 7개년도 관찰치 중에서 2개와 3개에서 $C_i(t)$의 값이 1보다 작다.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기계는 $C_i(t)$의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도 그리 많이 크지는 않다. 따라서 이들 산업은 다른 개도국에서 보는 '노인성 유치산업 (geriatric infant industry), 즉 소비자에게 큰 후생상의 부담을 주면서 성숙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산업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노인성 유치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수송기계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수송기계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강하지는 않지만 $C_i(t)$가 하락한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

5)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식 (1)에서 $C_i(t)$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산업, 특히 성숙산업의 단계를 지나 사양단계에 들어간 산업에 대한 실효보호율이 올라감으로써 $C_i(t)$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양산업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1차산업, 특히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1970년부터 $C_i(t)$가 1보다 컸던 작물이다. 작물에 대한 실효보호율과 $C_i(t)$는 1970년부터 199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것은(Ricardo모델에서와 같이) 수확체감의 원리하에서 정부의 보호에 따라 경작의 경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은 아니다. 농산물의 경지면적은 1970년 212만ha에서 1990년 211만ha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경지이용면적은 1970년 326만ha에서 1990년 241만ha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에서 경작의 경계는 축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농가인구도 1970년의 1,442만ha에서 1990년의 666만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 이후에 대해서도 농촌인구의 대부분은 농업 이외의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는 노년층으로서 이들의 농업노동은 기회비용이 0인 특정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이들이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자원배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1차산업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사양산업에 대한 적정한 정책은 급격한 개방과 생산 감축이라기보다 점진적 감축일 것이다. 그런데 1990년까지 바로 이러한 정책을 써 왔기 때문에 1970년부터 1990년의 추세를 연장하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있다. $C_i(t)$를 t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것이 유의성이 없더라도, $C_i(t)$가 1970년부터 1990년간 단조감소했다면 수송기계산업이 성숙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표 2〉에 나타난 수송기계의 8개 $C_i(t)$ 수치는 단조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C_i(t)$ 값이 단기적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관찰치들을 평균하여 그 추세를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만약, $C_i(t)$를 2개년도씩 평균하면 4개의 평균치에서 단조감소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4개 평균치는 1.422, 1.329, 1.305, 1.217이다).

유치산업을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정책에 의해 중점지원을 받은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흥미 있을 것이다. 신고전파나 '시장친화적 '접근법에서는 19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야말로 유치산업 육성정책이 실패한 전형적 예로 간주되고 있다.

〈표 2〉에서 유치산업으로 분류된 12개 산업 중에서 식료품, 가죽, 나무의 3개 산업은 경공업으로서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육성대상이 아니었다. 이 산업들은 1980년까지는 모두 성숙하였다. 고무, 비금속광물, 조립금속은 명목상으로는 중화학공업에 속하지만, 1970년대의 중점육성대상은 아니었는데, 이 중 고무는 분명히 성숙하였고 나머지는 불분명하다.

나머지 6개 산업은 중점육성대상인 중화학공업인데, 이 중 철강과 전기기기 2개 산업이 1970년대부터 1990년간 실제로 성숙하였다. 정밀기기와 기타화학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성숙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기계와 수송기계 2개산업만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2개 산업(다른 중점육성사업도 마찬가지다)은 1970년대에 보호 말고 재정금융상의 여러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이 1980년대에는 대부분 정리되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재정금융상의 보조금을 실효보호율에 더하여 실효보조율을 계산한다면 성숙하는 경향이 더 잘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6]

결국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으로 중점육성한 산업은 성숙했거나 성숙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중점육성대상이 아닌 유치산업도 성숙했지만, 신고전파의 논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중점육성된 이들 산업이 성숙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상의 실증적 결과는 여타 개도국에 대한 연구 결과와 판이하게 다르다. 유치산업 중에는 성숙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개도국에서 유치산업은 별로 성숙하는 예가 없다는 인상 을 준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

6) 여기서 보조금은 보호를 제외한 모든 유인책을 말한다. 재정금융상의 유인책들은 그 크기에서 실효보호율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중화학공업화정책 실시기간중에 상당한 액수에 달하였다가 1980년대에 축소되었다. World Bank ([26], p. 309)와 Stern 등 ([21], 제3, 4장) 참조.

Ⅳ. 비교우위와 산업성장

유치산업의 성숙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슈는 유치산업이 순조롭게 성장하는지, 이미 성숙한 산업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지표와 산업성장 간의 관계를 고찰해야 한다. World Bank [26]의 제6장에서는 5개 동아시아국가에 대하여 제조업부가가치 중에서 차지하는 몫의 변동과 기초 및 기말의 일인당임금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한국과 대만에 대하여 음의 관계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일인당임금은 비교우위의 대변수, 제조업부가가치 중에서 차지하는 몫의 변동은 산업성장의 대변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주어진 실효보호율과 $C_i(t)$ 자료를 이용하면 비교우위와 산업성장 간의 관계를 바로 분석할 수 있다. 〈표 3〉은 1970년부터 1990년간 각 5년마다에 대하여 실질생산액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성장의 패턴이 정태적 비교우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각 부문에 대해 다음의 회귀분석을 한다.

$$GRi(t, t+s) = \alpha_i + \beta_i C_i(t) + \varepsilon_{it} \qquad (4)$$

단, $GR_i(t, t+s) = t$년도와 $t+s$년도 사이의 성장률

$i = 6, 7, \cdots, 16, 18, \cdots, 29$

제조업에 대해서만 이러한 분석을 하는 이유는 1차산업의 몇 부문이 명백하게 사양산업이기 때문이다. 역시 $C_i(t)$의 행태가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석유 및 석탄산업 ($i = 17$)은 제외한다. 성장률을 계산하는 기간 s는 편의상 5, 10, 15, 20으로 잡았다. s를 각각 5, 10, 15, 20년으로 잡는 데 대해서는 4, 3, 2, 1개의 회귀식이 있다. 각 산업의 규모가 다를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단순최소자승법뿐 아니라 가중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s)으로도 추정한다. 가중최소자승법의 경우 가중치는 국제가격기준부가가치로 하였다.

기울기계수, 즉 β_i의 추정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i의 추정치는 모두 양수이며, 두 추정방법 중에서 더 정확한 가중최소자승법의 경우 1970년부터 1975년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이내에서 통계적 유의성(쌍방검증)이 있다. 즉, 수출지향적 공업화의 상대적 초기의 단기간을 제외하면 비교우위와 산업성장은 서로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균형체계하에서 자원에 대한 유인은 실효보호율과 단조증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Black과 Taylor [12]). 그러나 1970년부터 1980년대 한국의 산업성장은 실효보

〈표 3〉 생산액증가율

(단위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 작물	4.3	−2.0	4.7	−0.8
2. 기타농산물	4.1	2.5	12.2	1.6
3. 임산물	−0.3	0.4	0.7	−6.8
4. 수산물	9.6	1.2	5.1	3.7
5. 광산물	7.5	2.2	2.8	−1.9
6. 식료품	3.0	8.0	4.3	4.5
7. 음료품	13.7	9.3	4.0	13.9
8. 연초	12.5	8.5	4.9	4.7
9. 섬유	23.0	6.6	6.7	4.7
10. 의복	25.0	16.7	4.7	4.7
11. 가죽	34.8	8.2	9.4	6.6
12. 나무	11.4	6.0	3.9	7.5
13. 종이	14.5	13.4	11.7	16.7
14. 인쇄 · 출판	10.6	14.4	15.0	5.7
15. 산업용화학	26.8	17.6	8.4	13.1
16. 기타화학	20.8	12.9	13.9	15.3
17. 석유 · 석탄	8.1	11.9	3.8	8.6
18. 고무	23.8	16.7	10.3	7.2
19. 도자기	8.6	25.5	8.1	1.9
20. 유리	18.1	13.1	14.5	16.3
21. 비금속광물	14.2	13.0	8.1	9.7
22. 철강	33.5	24.6	10.3	9.1
23. 비철금속	26.8	21.8	14.9	12.9
24. 조립금속	21.4	15.5	18.5	15.2
25. 기계	29.7	7.5	21.6	24.7
26. 전기기기	39.7	24.1	15.3	20.5
27. 수송기계	21.5	18.3	20.9	19.3
28. 정밀기기	37.0	19.3	12.5	19.0
29. 기타제조업	25.8	17.2	10.8	10.3

자료 : 한국은행.

주 : 증가율은 모두 1985년 불변가격기준으로 각 기간중의 증가율을 연률로 환산한 것이다.

호율뿐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즉, 재정금융상의 여러 가지 유인조치, 특히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 성장률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에 틀림없다. 신용할당은 그 금리차만으로 보면 실효보호의 효과에 비할 수 없지만, 신용의 가용성(availability)을 통해 성장에 미친 효과는 매우 컸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표 4〉 생산액증가율의 비교생산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s = 5년		
1970～1975	9.034(1.551)	5.484(0.895)
1975～1980	4.400(0.758)	14.245(2.882)*
1980～1985	17.208(4.318)**	19.023(5.302)**
1985～1990	13.795(2.851)**	16.413(3.091)**
s = 10년		
1970～1980	13.576(1.445)	21.383(1.891)+
1975～1985	9.838(1.117)	20.720(2.578)*
1980～1990	40.558(4.596)**	44.842(5.080)**
s = 15년		
1970～1985	19.817(1.562)	34.569(2.452)*
1975～1990	19.121(1.318)	30.910(2.059)+
s = 20년		
1970～1990	30.144(1.660)	48.216(2.287)*

주 : 1) 식 (4)의 기울기계수 β_1의 추정치임.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으로서, **,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쌍방검증).
2) 표본수는 식 (4)에서 제시한 것처럼 23개임.

기업의 투자결정과 성장에는 정부-기업 간의 비공식 의사소통을 통한 설득과 위협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산업의 장래에 대한 기업가 자신의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기업이 장래에 대한 예상을 하는 데는 정부가 제시한 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표 4〉의 결과는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작용한 결과 초기에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의 성장률이 더 높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여기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중점육성대상이 되었던 산업성장률을 다른 산업의 성장률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표 5〉는 중점육성산업과 기타범주의 산업들에 있어서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표 5〉는 8개의 중점육성산업이 기간을 어떻게 잡더라도 다른 산업보다 빨리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중점육성산업 중에는 6개의 유치산업이 8개 산업평균보다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

〈표 5〉 산업군별 생산액증가율

(단위 : %)

s = 5년							
1970~1975	10.8	18.8	28.6	29.1	14.1	4.7	10.2
1975~1980	9.2	17.0	19.7	20.2	13.0	−0.5	8.9
1980~1985	5.9	11.9	14.0	15.1	9.3	5.3	8.5
1985~1990	6.4	14.5	16.4	17.1	11.7	0.7	9.8
s = 10년							
1970~1980	10.0	18.0	24.1	24.6	13.6	2.1	9.5
1975~1985	7.5	14.4	16.8	17.6	11.2	2.3	8.7
1980~1990	6.1	13.2	15.2	16.1	10.5	3.0	9.1
s = 15년							
1970~1985	8.6	15.9	20.6	21.3	12.1	3.1	9.2
1975~1990	7.1	14.5	16.7	17.5	11.3	1.8	9.1
s = 20년							
1970~1990	8.0	15.6	19.5	20.3	12.0	2.5	9.3

자료: 한국은행.

주 : 1) *LI*와 *HCI*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나타냄. 중화학공업은 화학, 석유 및 석탄, 고무, 비금속광물, 철강, 비철금속, 조립금속, 기계, 전기기기, 수송기계, 정밀기기(〈표 3〉의 15~18과 21~28)가 그에 해당한다. 경공업은 나머지 제조업이다.

2) *'Favored* 는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중점육성부문으로서 산업용화학, 기타화학, 철강, 비철금속, 기계, 전기기기, 수송기계, 정밀기기(〈표 3〉의 15~16, 22, 23, 25, 26~28) 등이 그에 속한다. 그 중에서 산업용화학과 비철금속은 1970년 현재 유치산업이 아니므로 이 둘을 제외한 것이 *'Favored Infants*,'즉 중점육성유치산업이다.

3) *MAN*, *PRIM*, *ALL*은 각각 제조업, 1차산업, 전교역재산업을 나타낸다.

V. 검토 및 결론

이상의 분석에서 한국의 경우 유치산업이 성숙했거나 성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개도국에서와 다른 특이한 현상인 만큼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유치산업이 성숙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설명도 있고, 다른 개도국의 경험에 대한 설명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대개 다음과 같은 것

들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은 수입대체공업화하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겪었던 주기적인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다. 다른 개도국들은 주기적인 외환위기 때문에 성장이 단속적(stop-go) 패턴을 띠고 나타났지만(Diaz Alejandro [14]), 한국은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성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결과 구조변화도 일어날 수 있었고, 구조변화의 내용 중에는 유치산업의 성장과 성숙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유치산업이 성숙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로는 '유치산업수출'을 들 수 있다. 수출지향적 산업화하에서 수출은 자유화된 반면 수입은 자유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유치산업의 국내시장은 대부분 소수의 독과점기업이 지배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가격차별정책을 쓸 수 있었다. 더욱이 수출보조금이 상당히 주어졌다는 것도 유치산업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수출은 매우 강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치산업의 성숙에 도움이 되었다(Westphal [25]).

유치산업의 성숙을 가져온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국내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이다. 고도성장기의 일본기업들처럼 한국기업들도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치러왔다. 물론 한국은 일본과 달리 고도성장기간을 통하여 산업별로 보거나 경제 전체로 보거나 집중률이 상승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가격은 몰라도 제품개발이나 마케팅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 온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 결과 국내시장이 보호되어 있어도 효율성을 올리려는 유인은 항상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小宮隆太郎 등 [27], pp. 238~239, Amsden과 Singh [8]).

유치산업이 성숙한 네 번째 메커니즘은 1980년대 들어 시행한 '개방예시제'이다. 개방예시제에 의해 보호하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가까운 장래에 수입개방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생산을 포기하지 않는 기업은 생산성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획득할 수밖에 없었다.

다섯 번째 메커니즘은 아마도 가장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서 정부가 창출한 '유효경합'(effective contest)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다른 개도국에서와 달리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보호 및 보조금 등의 혜택이 그냥 주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성과를 거둘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성과의 궁극적 기준은 수출이었다(World Bank [26], 제6장, Amsden [7]). 집치지도자, 특히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수출지상주의하에서 기업가들에게 장기적으로 정부의 눈에 들려면 수출을 해야 하며 국내생산만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강력하게 시사하였다. 기업들은 단순히 수출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대정부관계에 있어서 장래에 예상못한 사태가 생길 경우 혜택을 받거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수출을 통해 점수를 따 놓으

려 하였으며, 이런 점에서 한국정부는 기업들간에 '수출문화 를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Wade [22]). 이러한 여건하에서 유치산업의 생산자들은 빨리 수출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유치산업은 보호의 벽 뒤에 안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압력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환위기등으로 성장이 저해받는 일이 없었다.

유치산업의 성장도 유치산업의 성숙과 비슷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보호받은 유치산업이 빨리 성장하지 못한 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업들은 보호의 장벽 뒤에서 안주하면서 서로 담합, 생산량을 제한하고, 기술혁신보다는 지대추구(이권추구, rent-seeking activities)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 기업에게는 이러한 행태로부터 벗어날 유인이 없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저해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유치산업이 성숙산업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유치산업이 새로 도입된 산업으로서 생산액이 작은 베이스로부터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유치산업은 장기적으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고 생산성향상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의 잠재력이 높다.

유치산업 보호가 그 성숙과 성장으로 귀결하였다는 것은 신고전파는 물론이고 '시장친화적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위에서 고찰한 것처럼 유치산업의 성숙과 성장에는 시장기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였다. 수출시장은 외환과 학습의 장을 제공해 주었고 궁극적인 경제적 성과의 기준이 되었다. 국내시장과 수입이 제공하는 시장기율도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신고전파나 시장친화적 견해를 지지해 주는 증거가 아니다.

위에서 본 통계적 결과와 그 원인에 대한 해석으로 보아 신고전파나 시장친화적 견해보다는 수정주의 또는 '통치된 시장 의 견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보호 및 기타의 방법으로 유치산업을 육성하고 시장기구를 이용하여 그 성숙과 성장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럴 만한 국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개방체제가 기득이권에 의해 포획되지 않고 유치산업의 성숙을 유도하려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이 불가결의 조건이다. 수출을 성과의 기준으로 한 '유효경합 은 정부와 기업 간의 비공식적이고 묵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강력한 개발주의국가(developmental state)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한국은 강력한 개발주의국가를 갖추었다고 생각되지만, 제Ⅱ, Ⅲ절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2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성숙되는 경향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산업이 있다. 한국은 한국인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발전에 관한

한 세계적 모방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한국의 유치산업 보호의 예가 다른 개도국에 의해 효과적으로 모방될 수 있을지는 1차적으로 그 나라가 유효한 개발주의국가를 확립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부 록

〈부표〉 실효보호율($ERP_i(t)$)과 비교생산비지표($C_i(t)$)의 추세(1970~1990)

1. 작물	0.0412(7.829)**	0.0427(9.388)**
2. 기타농산물[2]	0.129(5.568)**	0.125(6.130)**
3. 임산물	0.0218(1.671)	0.0233(2.206)+
4. 수산물	−0.0162(−1.088)	−0.0147(−1.0891)
5. 광산물	0.0191(2.770)*	0.0205(2.996)*
6. 식료품	−0.0428(−4.925)**	−0.0413(−3.835)
7. 음료품	−0.00244(−0.352)	−0.000973(−0.225)
8. 연초	−0.0207(−1.551)	−0.0193(−1.490)
9. 섬유	0.000152(0.038)	0.00163(0.600)
10. 의복	−0.00416(−0.496)	−0.00269(−0.431)
11. 가죽	−0.0635(−7.533)**	−0.0620(−7.865)**
12. 나무	−0.0381(−3.678)*	−0.0367(−3.002)*
13. 종이	0.00342(0.894)	0.00491(1.267)
14. 인쇄·출판	0.0100(0.909)	0.0115(0.873)
15. 산업용화학	0.00610(0.500)	0.00757(0.873)
16. 기타화학	−0.0252(−3.065)*	−0.0238(−2.056)+
17. 석유 및 석탄[2]	–	–
18. 고무	−0.0109(−1.217)	−0.00940(−0.856)
19. 도자기	0.00167(0.179)	0.0317(0.364)
20. 유리	−0.00313(−0.332)	−0.00166(−0.202)
21. 비금속광물	0.00138(0.176)	0.00288(0.515)
22. 철강	−0.0368(−6.166)**	−0.0353(−3.986)**
23. 비철금속	0.0158(1.019)	0.0173(1.116)
24. 조립금속	−0.00491(−0.845)	−0.00346(−0.604)
25. 기계	0.00718(0.735)	0.00866(1.095)
26. 전기기기	−0.0119 (−2.532)*	−0.0104(−1.796)
27. 수송기계	−0.0116(−1.250)	−0.0101(−1.365)
28. 정밀기기	−0.0206(−2.920)*	−0.0192(−3.648)*
29. 기타제조업	0.0126(1.125)	−0.0140(1.865)

주: 1) 식 (1)과 식 (3)에서의 기울기, 즉 b_i와 d_i의 추정치임.

2) 기타농산물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 있어서와 달리 관찰치가 8개가 아니고 6개인데, 그 이유는 국제가격기준부가가치가 음수인 1988년과 1990년을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석유 및 석탄은 원유파동 때문에 $ERP_i(t)$와 $C_i(t)$가 불규칙한 행태를 나타내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이다. **, *, + 는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쌍방검증).

◈참 고 문 헌◈

1. 金光錫 · 래리 E. 웨스트팔, 『韓國의 外換 · 貿易政策』, 1976, 韓國開發研究院.
2. _____ · 洪性德, 『名目 및 實效保護率構造의 長期的 變化』, 1982, 韓國開發研究院 研究調査報告 82-02.
3. 兪正鎬 외, 『産業保護와 誘引體制의 歪曲－1990년 名目 및 實效保護率推定』, 1993, 韓國開發研究院.
4. 李濟民, "유치산업의 보호와 성숙", 『연세경제연구』, II(2), 1995, pp. 171～194.
5. 洪性德, 『名目 및 實效保護率의 構造變化』, 1992, 韓國開發研究院 政策研究資料 92－01.
6. Amsden, A.,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8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7. _____, "'Post-industrial 'Policy in East Asia," Mimeographed, August, 1995,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Seoul, August.
8. _____, and A. Singh, "The Optimal Degree of Competition and Dynamic Efficiency in Japan and Korea," *European Economic Review*, 38, 1994, pp. 941～951.
9. Balassa, B. and Associates,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971,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0. _____, *et al.*, *Development Strategies for Semi-industrial Economies*, 1982,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Bank).
11. Bell, M., Ross-Larson, B. and L. E. Westphal,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Infant Indus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6, 1984, pp. 101～128.
12. Black, S. L. and L. Taylor, "Practical General Equilibrium Estimation of Resource Pulls under Trade Liberal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1), 1974, pp. 37～58.
13. Corden, M. W., *Trade Policy and Economic Welfare*, 1974, Oxford: Clarendon Press.
14. Diaz Alejandro, C. F., "Trade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 Kenen (ed.),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Frontiers for Research*, 197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 Harrison, Ann, "An Empirical Test of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September, 1984, pp. 1090～1095.

16. Jacobsson, S., "The Length of the Infant Industry Period: Evidence from Engineering Industry in South Korea," *World Development*, 21, 1993, pp. 407~419.

17. Krueger, A. O. and B. Tuncer, "An Empirical Test of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72, 1982, pp. 1142~1152.

18. Kwon, J., "The East Asian Challenge to Neoclassical Orthodoxy," *World Development*, 22(4), 1994, pp. 635~644.

19. Lee, Jaimin and S. Rashid, "Korean Manufacturing Success: Did Selective Intervention Work?" Mimeographed, Apr. 1996,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 Nishimitsu, M. and Page, J. M., Jr., "Productivity Change and Dynamic Comparative Advanta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8, 1986, pp. 241~247.

21. Stern, *et al., Industrialization and the State: The Korean Heavy and Chemical Industry Drive*, 199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2. Wade, R.,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199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3. _____ , "Resolving the State-Market Dilemma in East Asia," in Ha-joon chang and R. Rowthorn, *The Role of the State in Economic Change*, 1995, Oxford: Cearendon press.

24. Westphal, L. E., "Empirical Justification for Infant Industry Protection,"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445, 1981.

25. _____ , "Fostering Technological Mastery by Means of Selective Infant-Industry Protection," in M. Syrquin and S. Teitel (eds.), *Trade, Stability, Technology, and Equity in Latin America*, 1982, New York: Academic Press.

26.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199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7. 小宮隆太郎・奥野正寛・鈴村興太郎 編, 『産業政策の經濟分析』, 1984, 東京大學出版會.